

충남 재생에너지와 지역에너지 전환토론회 토론문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장

최 충 식

- 충남 석탄화력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전국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와 당진시 등이 신규 석탄화력 증설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섬.
- 많은 도민들도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피해를 위협하는 석탄화력 증설정책에 반대하고 있음
- 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가 부각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은 태양광 및 바이오매스가 될 것임.
- 그러나 태양광에너지나 바이오매스 사업이 민주적 의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들의 영리목적으로 추진되면서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추진되어야 석탄화력에 대응한 대안에너지로 평가받을 수 있음.
- 충남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제기된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인 바이오에너지 사업은 주로 목질계와 폐기물, 가축분뇨를 활용하고 있음. 이러한 시설은 악취와 병충해를 유발시킨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악취문제 해결과 지역주민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함.
- 바이오에너지와 함께 대표적인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발전 사업임. 현재 충남도에 접수된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민원사례는 70여건이 넘고 있음. 주된 이유로는 첫째, 대규모 산림 벌목에 따른 경관저해 및 환경변화(토사유출, 생태계 파괴)를 들고 있고 둘째, 전자파 피해 및 주변 지가하락 우려. 셋째, 개인 사업자의 수익사업에 국한하여 지역발전 효과 미약. 넷째, 주거 인접지역까지 무분별하게 설치됨에 따라 열과 빛 공해로 기피시설로 전락하고 있음. 또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전기사업허가와 개별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의 이원화가 되어있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됨. 무엇보다 안타까운 일은 재생에너지 사업이 여타 개발사업과 비슷하게 추진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찬성과 반대편으로 나뉘면서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음. 충남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활성화되기 위해

서는 앞서 제기된 문제를 극복해야 함.

이를 위해서 첫째,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해서 전기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의 일원화가 필요함. 둘째, 지자체별 전기사업허가 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전기사업법)하고 태양광 개발행위 가이드라인에 대한 광역차원의 조례를 제정해야 함. 셋째,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민원 해결을 위한 이른 바, 에너지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제도적, 비제도적 수단을 동원하여 시민참여 방안을 높여야 함. 넷째, 사업지역 주민참여 보장과 태양광 발전 수익의 공유를 검토하여 태양광 설비를 통한 소득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영리목적으로만 사업을 추진할 경우, 석탄화력 못지않은 환경파괴와 지역갈등이 야기 될 것임. 재생에너지의 합리적 보급을 위해 에너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을 개발하고 소통과 참여에 의한 재생에너지 확산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함.